

데이터·레벨 국가표준 개발...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큼'

국표원, KS 제정작업 착수
표준화 통해 상용화 가속화
관련 총회·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 표준화 선점도 추진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전남 여수 하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



자율주행차

/유투이미지

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율차 표준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자율차 표준화 포럼은 지난 2018년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했다.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해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해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레벨0(운전자동화가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전자동화)의 6단계로 분류해 정의한다.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

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文 “韓, 백신 우수기업 많아... 관심 가져달라” 19일부터 월급 줄 때 명세서 반드시 줘야

文, 해썬 CEPI 대표와 접견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개발 기대”
세피 지원 감사 전하며 관심 당부
해썬 “글로벌 선도국가 조건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리처드 해썬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피) 대표를 청와대에서 접견하며 “마지막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CEPI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백신 개발이 중요한 만큼 세피의 지원을 당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세피는 한국 정부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지원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해썬 대표, 니콜레이센 세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과 접견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세피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 덕분에 전례없이 빠른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그것으로 인류의 생명을 많이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에 관한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리처드 해썬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한국이 백신 개발에 나선 가운데 세피 측이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한 뒤 “세피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세피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이 ‘비교 임상 방식’으로 백신 개발에 나선 가운데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인 점을 언급, “백신 개발사의 대조 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해썬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K-방역 프로세스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썬 대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로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고용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임금 항목·계산 방법 등 표기해야

오는 19일부터 사업주는 월급날 임금 총액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을 상세히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임금이 공제된 내역은 무엇인지 등도 명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상세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출근 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사업장 구

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일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 대신 사업장 지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이 기간 안에 개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물어봐도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주유소 요소수 재고 온라인으로 공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홈페이지

정부는 전날 요소수 생산량이 68만 3000리터(1)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60만 1)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

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에 속도를 내 시중에 공급량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요소수를 공급 중인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에 이어 강원 지역에 주유소 4곳을 추가 지정해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원 차관은 “100여개 주유소의 외 다른 주유소를 포함해 최종 판매처인 전체 주유소에 입고·판매되는 유통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요소수 시장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에 전국 거점 주유소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 현황 공개를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륙 물류기지, 항만 내·인근,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등에 있는 주유소에 당일 입고된 요소수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다.

요소수 재고 정보는 오후 2시와 8시에 업데이트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외투기업 “가정용 제품인증 부담 완화를”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첫 회의
정부에 건의... 관련 부처 검토키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자문그룹의 첫 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직접투

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정부에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고,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